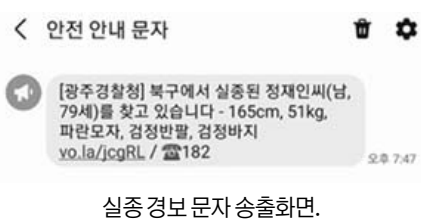


“어르신을 찾습니다”... ‘실종경보문자’ 역할 특특

치매 노인·아동·장애인 등 실종자 초기 발견에 큰 도움 광주지역서 총 12건 발송...인근 지역 주민 제보 잇따라

경찰청이 올해 6월부터 도입한 “어르신을 찾습니다” 등의 ‘실종경보문자’가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인 탓에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함데, 최근 시민들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9일부터 실종 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종경보문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주로 실종신고 대상자가 휴대전화나 배회감지기를 갖고 있지 않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CCTV로 동선 확인이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적사항을 전송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



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상습 가출 전력이 없어야 하며, 실종 7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실종자를 찾는 데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광주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A(79)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인과 함께 집 근처 뒷밭에 갔다가 갑자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하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유심히 본 한 시민의 신고로 발송 6시간 만에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찾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8월9일에는 70대 치매 노인 B씨가 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민의 신고로

광주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견됐다.
안부만 묻고 지나치려던 신고자는 실종 경보 문자를 떠올리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일에는 서부소방서 소속의 응급소방대원이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
문자 내용 중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봤던 신고자는 60대 C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경보 문자를 통한 시민들의 잇따른 제보로 자칫 장기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 노인 등을 초기에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여성청소년범죄과가 맡아오던 실종 사건 업무를 형사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 시행 이후 시민들로부터 빠른 시간 내 제보 받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제도 도입이후 이날까지 지적장애인 3건, 치매 환자 9건 등 총 12건의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최명진기자

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비밀 술판’ 급증

수도권이 82.1%...광주·전남 318명 적발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보다 올해 8월말까지 총 1만3천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집합금지·제한 위반 9천79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

성 등 방역지침 위반 4천60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천905명, 경기 3천803명, 인천 2천528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82.1%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는 119명, 전남은 19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천61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1만2천59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

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낮은 과태료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재개발 구역 2곳의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아빠 찬스’ 박사학위 부당 취득父子 집행유예

출석미달 아들에 A+학점...지도교수 등 9명도 벌금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동료 교수들이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했고, 특히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정규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줘야 한다.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했고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B씨가 출석한 것

처럼 기재하고 학점과 박사 학위를 부여했고 학위의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관련 교수들의 1심 선고를 있었다”며 “조선대 대학원생들과 저희 대학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재개발 조합장 2명 고발”...업무상 배임 혐의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 철저한 수사 촉구

광주지역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가 월산1·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장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조합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동4구역을 포함한 13개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 용역과 관련해 조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자료를 광주 경찰청에 제출하겠다”며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 금액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9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시 법 29조 9항에 ‘철거공사에는 석면 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고 명문화시켰다”며 “분할 발주를 금지하는 것은 용역을 세분화해서

계약할 경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태훈기자

내년 현역병 입영, 오늘 선착순 접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022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일을 10월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현역관정을 받은 2002년생, 재학생입영연기 및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입영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선택 즉시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과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년도)’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김동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